



북한 핵실험과 경제 펀더멘털

朴宗奎 (先任研究委員, 3705-6257)

경제 펀더멘털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요인은 단연 安保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불안정 균형에 충격을 가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둘러싼 安保地形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 결국,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경제의 가장 기본적 펀더멘털이 바뀔 수 있다는 새로운 불확실성이 등장한 셈이다. 일반국민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침착했으며 아직까지 국내경제도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대북 제재 수위가 경제붕쇄에서 공중 및 해상 봉쇄로 넘어갈 경우 투자심리가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실물경제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대해, 비록 경제정책은 아니지만, 한미공조를 공고히 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경제정책보다도 투자심리 안정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이번 사태가 몇 년에 걸쳐 장기화될 가능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정책대응도 장기적인 시각에서 마련되어야 하며, 발생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구체적인 대비책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특히 북한의 붕괴 가능성에 대비한 연구는 재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의 펀더멘털(fundamentals)이라 하면 재정수지, 인구, 기술력, 잠재성장률, 신인도 등등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가 거론된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요인은 단연 안보를 꼽아야 한다. 그것은 물론 일반적인 경제문제의 범주에는 속하지 않지만 우리 경제가 좀 더 좋아질 수 있느냐 아니냐의 차원을 넘어, 죽고 사는 갈림길, 또는 존재하느냐 망하느냐의 분기점(死生之地 存亡之處)으로 돌변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

경제 펀더멘털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요인은 단연 安保를 꼽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보는 우리 경제가 죽고 사는 갈림길 또는 존재하느냐 망하느냐의 분기점으로 돌변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으로서 한국금융연구원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함을 밝혀둡니다.



러므로 안보는 그야말로 가장 근원적인 경제 펀더멘털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 싱가포르 리관유 전 총리도 처음 경제개발을 시작하면서 가장 최우선순위로 다루었던 문제가 “기본을 바로 세운다(Get the Basic Things Right.)”, 즉 말레이시아에서부터 분리되어 나온 직후 벌어졌던 매우 불투명한 당시의 안보상황을 바로잡는 일이었다.¹⁾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안보가 확고하지 않다면 안정적인 지속적 경제변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안보는 가장 근원적 경제 펀더멘털

핵문제가 터지기 훨씬 이전부터 극동지역의 정치적 역학관계는 이미 매우 불안정한 政治的 火山(political volcano)이라 할 만큼, 안정적이 아닌 準安定的 균형으로 규정되어 왔으며 이러한 準安定的 상태는 겉보기에는 신축성이 거의 없으나 국가간 알력에 의해 강한 충격이 가해질 경우 파괴적인 연쇄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불안정한 균형으로 평가되어 왔었다.²⁾

북한의 핵실험은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불안정균형에 충격을 가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둘러싼 安保地形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은 이러한 불안정한 균형에 충격을 가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둘러싼 安保地形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넓게는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역학구도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경제의 바닥이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는 지붕이 무너지지 않기만을 바라면서 기둥을 붙들고 있어야 하는 처지에 빠질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이제 핵실험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 가기는 불가능해졌다는 점이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우리 경제에 득이 될 가능성은 지금으로선 거의 없어 보인다.

1) Lee, Kuan Yew, From Third World to First : The Singapore Story, 1965–2000, Oct. 2000.

2) Brezezinski, Zbigniew, The Grand Chessboard : American Primacy and Its Geostrategic Imperatives, Basic Books, 1997.



북핵실험은 安保地形을 바꾸는 폭발력

먼저, UN 안보리 결의를 통한 대북 경제봉쇄는 거의 확실한 것 같다. 그 다음 단계는 공중 및 해상 봉쇄이고 다음으로는 제한적 군사조치를 비롯하여 점점 강도가 높아지는 제재수단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UN 회원국들의 단계별 조치가 시행될 때마다 북한과 우리나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들 사이에 高難度의 게임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그 게임의 귀결은 무엇이며 그 종착점으로 가기까지 얼마의 시일이 필요할지,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안보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다.

이 사태를 무력충돌 없이 외교적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벌써부터 북한은 ‘전면적 제재가 이루어지면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는 위협을 서슴지 않고 있고 여기에 대해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북한의 공격을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이처럼 우리를 둘러싼 주변상황은 전례 없이 긴장이 고조되어 가고 있는데도 정작 우리 정부의 입장이나 대응방향은 아직껏 단호해 보이지 않는다.

일반국민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태연했으며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위험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예상보다 작았던 단기적 파급효과

일반국민들도 예상보다는 태연한 것 같다. 발표 당일 폭락하였던 주가도 하루 만에 반등하였는가 하면, 환율도 하락하였을 뿐 아니라, 문제해결에 대한 낙관론마저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반응은 어쩌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무작정 패닉상태에 빠진 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누구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중대한 문제에 당면하였으면서도 막연히 희망적 기대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일이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이건, 주가가 반등하건, 환율이 하락하건, 문제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자동차를 보고도 눈 하나 깜짝 않는다 해도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북 제재 수위가 경제 봉쇄에서 공중 및 해상 봉쇄로 넘어갈 때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경우 실물경제는 악영향을 받게 되며 그때에 가서야 비로소 이번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체감하게 될 것이다.

핵실험으로 인하여 주변 안보상황이 질적으로 달라질 것이라면 이는 우리 경제의 가장 근본적인 펀더멘털이 안개 속에 휩싸이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미래의 모습은 시일이 지나면서 차츰 모습을 드러낼 것이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경제에 대한 악영향은 한 단계씩 강화될 것이며 최종적인 모습도 이제까지와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결국 이번 일로 인해 우리 경제는 매우 커다란 짐을 지게 된 것이다. 우리 국민이 태연하게 대처함으로써 국내경제에 대한 단기적인 부작용이 내부로부터 발생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의 발단은 외부로부터 불거질 수 있다.

공중·해상봉쇄시 투자심리 급랭 가능성

국내회사 CEO들과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회사의 CEO들을 대상으로 작년에 실시된 설문조사³⁾에 따르면 UN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될 때 전체 응답자의 7%가, 경제봉쇄가 가해질 때는 13% 정도가 투자를 철회하겠다는 응답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공중 또는 해상 봉쇄가 가해질 경우 투자를 철회할 것이라는 응답자의 비율은 53%로 갑자기 높아지며 제한적 군사제제가 가해질 때는 68%가 투자를 철회하겠다는 응답을 했다.

또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미공조 없이 대북 제재수위가 높아지면 투자 불안심리는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미공조를 공고히 하는 것은 비록 경제정책은 아니지만 현 시점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경제정책보다도 투자심리 안정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미공조 없이 대북 제재수위가 높아지면 투자 불안심리는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미공조를 공고히 하는 것은 비록 경제정책은 아니지만 현 시점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경제정책보다도 투자심리 안정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 결과는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가 경제제재에서 공중 및 해상봉쇄로 강화될 때 국내기업의 투자이건 해외기업의 국내 직접투자이건을 막론하고 투자 분위기가 급속하게 냉각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실물경제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으며 그때 가서야 비로소 이번 핵실험의 우

3) Kim, Byung-Kook, Caught in between Rising China and Hegemonic America: South Korea's Search for a Grand Strategy, mimeo,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Korea University, January 2006.



리 경제에 대한 악영향을 체감하게 될 것이다. 우리 경제 내부에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동요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북 핵실험의 경제적 악영향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일 뿐이라는 점을 상기해 둘 필요가 있다.

한미공조는 경제 불안심리 안정에 매우 중요

핵문제에 대한 대책에 있어서 참고해야 할 흥미로운 부분은 단계별 대북 제재조치가 한미공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투자심리에 더욱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미공조 없이 단계별 제재조치가 강화될 때 먼저 UN 안보리 결의 단계에서는 5%p, 경제봉쇄 단계에서는 7%p, 공중 및 해상 봉쇄단계에서는 10%p만큼 투자철회 응답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즉, 한미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북제재의 강도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투자심리는 더욱 더 불안해진다는 의미이다. 물론 한미공조는 그 자체로서 경제정책이라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경제 불안심리 진정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경제정책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인 정책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동안 한미공조 문제는 갖가지 이념적·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우되어 왔었지만, 적어도 이 시점에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면 될수록 어느 때보다 한미공조를 공고히 하는 것이 경제에 매우 중요한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음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가 몇 년에 걸쳐 장기화될 가능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정책 대응도 장기적인 시각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장기적인 문제를 단기적인 총량적 대책으로 풀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점에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경기부양을 하더라도 장기적인 시각에서

다음으로, 대책마련에 있어 유념해야 할 점은 일반국민들이 동요하지 않고 있는 만큼 정부도 냉정하고 침착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 9·11 테러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테러 피해 당사자도 아니었는데 정부의 대응이 너무 지나쳐, GDP 대비 추경예산안의 규모가 미국의 그것과 비슷할 정도였다. 對테러 전황



참전국이던 영국은 추경을 하지도 않았었다. 추경과 아울러 수많은 대책이 쏟아져 나왔었는데, 심지어 ‘벤처기업 투자손실 보전제도’, ‘투자손실 보전 주식투자 상품’ 같은 대책들은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은 뒤 백지화될 정도였다.

이에 비해 현재까지 정부의 대응자세는 비교적 신중해 보인다. 정부는 ‘경기가 지나치게 위축될 것에 대비해 경기부양기조로의 기조전환을 검토하겠다’는 정도의 입장만을 밝히고 있다. 향후 경기를 부양할 필요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좀 더 장기적인 시야를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사태의 여파가 몇 년에 걸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수 있음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재정을 팽창하면 경기는 당분간 나아지겠지만 그 뒤에도 상황이 종료되지 않는다면 재정적자가 계속 지나치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장기적인 문제를 재정팽창이나 금리인하 등 단기적인 총량적 대책으로 풀려고 할 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으로 발생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구체적인 대비책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특히 북한의 붕괴 가능성에 대비한 연구는 재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중기 및 장기 재정계획에서도 통일관련 재정소요액의 잠재적 부담을 명시적인 제약요인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대비책 마련

또한 정부는 앞으로의 사태 전개에 관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대처방안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이제까지 평화적인 해결, 군사적 충돌, 북한정권 교체 가능성 등을 비롯하여 수많은 시나리오가 나왔다. 물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리라고 믿지만, 정부는 이러한 시나리오에 대해 그것이 비록 지금은 소설처럼 들릴지라도 치밀하게 준비해 두어야 한다. 특히 북한의 붕괴 가능성에 대비한 연구는 재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1994년, 북핵위기가 처음 발생하였을 때를 전후하여 통일비용 추계 및 조달방안, 시나리오별 대응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 뒤 IMF 사태가 터지고 정부의 대북정책방향이 바뀌면서 그러한 논의는, 우리 경제에 엄청나게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단번에 사라졌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거의 10년이 흐르는 동안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였으나 구체적인 연구는, 필자가 아는 한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다. 심지어 통일관련 문제를 당연히 짚고 넘어갔어야 했을 『Vision 2030』과 같은 국가의 공식적인 중장기 계획에서조차 통일관련 재정 소요액은 전혀 구체적인 언급이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이제 이 논의는 다시 재개되어야 한다. 약 10년 전보다 훨씬 구체적이며 치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부의 중기 및 장기 재정계획에서도 통일관련 재정소요액의 잠재적인 부담을 명시적인 제약요인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경제의 가장 기본적 편더멘털이 바뀔 수 있다는 새로운 불확실성이 등장한 셈이다. 정책대응은 신중하게 하되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북한 붕괴 가능성 관련 연구는 재개될 필요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과연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불확실성은 사라졌지만 우리 경제의 가장 기본적 편더멘털이 바뀔 수 있다는 새로운 불확실성이 등장한 셈이다. 이런 때일수록 정책대응은 신중하게 하되 필요할 경우 과거의 정책기조에 얽매임 없이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KIF**